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해외출장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제고)
2. 출장목적: 유럽 선진국(네덜란드, 덴마크)의 농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정책 및 관련제도의 벤치 마킹
3. 출장지역: 네덜란드 및 덴마크
4. 출장기간: 2007년 9월 9일~15일(6박 7일)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기획조정실	선임연구위원	최지현

6. 출장일정

일 정	주요 활동내역	비 고
9월 9일	인천공항 출발 → 네덜란드 암스텔담 공항 도착	
9월 10일	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소 방문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 품질부 방문	
9월 11일	네덜란드 가축 및 축산물 위원회 방문	
	네덜란드 식품 및 소비자 안전청 방문	
	네덜란드 암스텔담 공항 출발 →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 도착	
	aT센타 로텔담 지사장 및 주재원 면담	
9월 12일	덴마크 식품·자원 경제연구소 방문	
	주 덴마크 대사 및 영사 면담	
9월 13일	덴마크 수의식품청 방문	
	덴마크 식품·농수산부 방문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 출발 → 네덜란드 암스텔담 공항 도착	
9월 14일 ~ 9월 16일	네덜란드 암스텔담 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7.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 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소	Head of section	R.L.M. (Ruud) van Uffelen	+31-70-335-8188 ruud.vanuffelen@wur.nl
	Researcher	W.H.M. (willy) Baltussen	+31-70-335-8171 willy.baltussen@wur.nl
	Researcher	R.C. (Rolien) Wiersinga	+31-70-335-8106 rolien.wiersinga@wur.nl
네덜란드 농업·자연· 식품 품질부	Deputy Director	Martin W.M. Olde Monnikhof	+31-70-378-4301 m.w.m.oldemonnokhof@minlnv.nl
	Area Desk Officer	Wil Huisman	+31-70-378-4166 w.j.c.huisman@minlnv.nl
네덜란드 가 축 및 축산 물위원회	Staff Officer	T. (Tjeerd) den Hollander	+31-79-368-7944 vip@pve.agro.nl
	Staff Officer	N.C. (Nicole) Roeters	+31-79-368-7943 vip@pve.agro.nl
네덜란드 식품 및 소비 자 안전청	Staff Officer	G.J. Bloemendal	-
	Coordinator	Louis W.J. Wijnhamer	+31-70-448-4467 Louis.Wijnhamer@vwa.nl
aT센타 로텔담지사	지사장	김동목	+31-10-462-1271 dmkim@euronet.nl
	부장	이명봉	+31-6-2024-2359 mbleeuk@dreamwiz.com
덴마크 식품· 자원경제연구소	Head of Division	Mogens Lund	+45-3533-6874 mogens@foi.dk
	Senior Advisor	Derke Baker	+45-3533-6814 db@foi.dk
주 덴마크 한국대사관	대사	이명수	-
	1등서기관 (영사)	오동일	+45-3946-0405 dioh90@hotmail.com
	1등서기관	양재화	+45-3946-0404 jaehyang09@yahoo.co.kr
덴마크 수의식품청	Officer	Claus Kjeldsen	+45-3395-6187 clak@fvst.dk
덴마크식품· 농수산부	Chief Economic Advisor	Mogens Nagel Larsen	+45-3395-8103 mnla@dfef.dk

II. 주요 출장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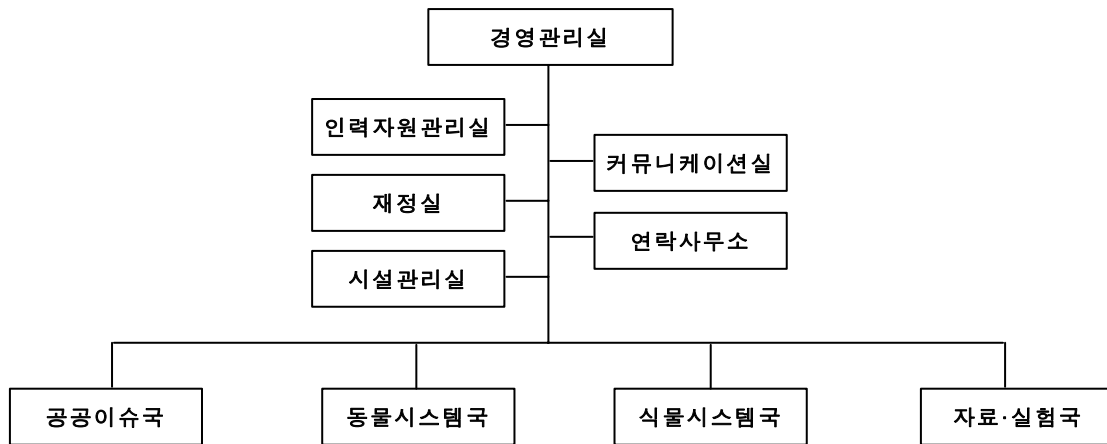
1. 네덜란드 출장 결과

1) 농업경제연구소 (LEI: Landbouw Economic Institute)

☐ 기본 현황

- 농업경제연구소는 농업·자연·식품 품질부 산하 농업연구국(DLO)를 구성하는 12개 연구소의 하나로 와게닝겐(Wageningen) 대학과 함께 결성된 와게닝겐대학연구센터(Wageningen Universiteit en Researchcentrum: Wageningen UR로 불림)의 부분임.
- 본 연구소는 네덜란드에서 최고 권위의 농업/수산분야 경제연구소로서 연구직 220명, 지원직 80명 등 약 300명이 종사하고 있음.
- 4개의 주요 부서로 구성된 농업경제연구소는 경제 및 사회과학방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연구 분야는 식품산업, 국제정책, 소비자 및 체인, 기업 및 관련분야, 자연환경, 농업경제 및 공간사용 등임.
- 농업경제연구소는 연간 약 800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 고객은 정부 기관(농업·자연·식품 품질부(LNV), 자연공간·환경·건설부(VROM), 수로교통부, 외무부, 교육부 등)과 정부 산하 기관, 지방기관, 생산자 조직, 민간 기업 등임. 이중 가장 큰 고객은 농업·자연·식품 품질부로 농업경제연구소 전체 예산의 50%를 지원하는 기관이기도 함.

<그림 1> 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소 (LEI) 조직도



□ 주요 면담 내용

- 네덜란드 농업은 그 역사가 매우 길고, 수출 주력 산업임. 현재 네덜란드 농산물 수출은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이고 특히 화훼나 채소류는 70 ~ 80%에 달함. 화훼의 해외 수출은 생산농가와 외국 소매업체간의 직접 계약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짐. 농산물은 도매시장의 경매를 통해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데, 연간 경매 규모는 450억 유로임.
- 네덜란드에서는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이 이미 성숙기로 접어든지 오래임. 수직결합의 성공요인으로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생산농가와 가공 및 유통업자들의 자발적인 수직결합이 필수적임. 다만, 정부는 양자의 분쟁을 조정하고 공동의 목적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함.
- 수직결합도 중요하지만 생산농가들 간 수평적 결합 (Horizontal cooperation)이 매우 중요함. 즉, 조직화를 통해 생산과 농자재 구매 등을 같이 하고, 거래교섭력을 높이며, 생산 기술의 공유를 통한 농산물의 고급화·세분화·차별화를 도모함.
-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EU의 공동농업정책(CAP)에 준하는 지원책이 있으나, 주로 연구·개발 지원, 교육 지원 등임. 지원정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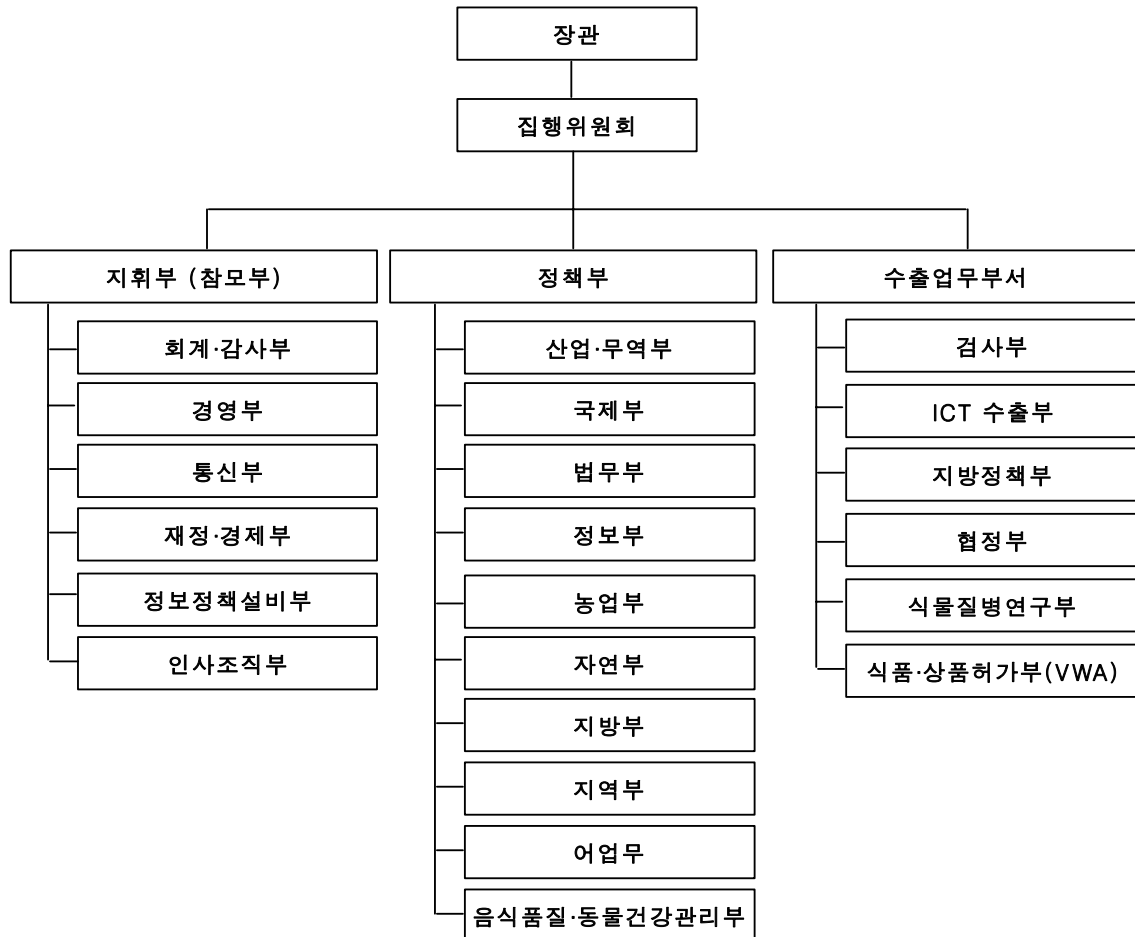
-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도 하나의 상품(Commodity)”이라는 인식의 전환임. 즉, 농산물도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소비자 지향적인(Consumer-oriented) 마인드를 생산단계에서부터 지녀야 함. 이는 신상품(신품목) 개발과 차별화 등으로 이어지게 됨.
- 네덜란드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가 농산물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임. 특히, 스페인이나 동유럽 등에서 유입되는 채소류와 프랑스나 이태리 등지에서 들어오는 유제품으로 국내외 시장이 잠식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품질과 브랜드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으로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노력을 함.
- 네덜란드 농업에 있어서의 현재 이슈로는 첫째, 화훼 등의 특수작물에서 식량작물로의 전환 여부, 둘째, 환경이나 동물복지(Animal Welfare) 등에 대한 비정부기구(NGO) 의견에의 대응 등임. 특히, 식량작물의 생산 증대에 관한 고민은 식량안보와 일부 관련되어 있음. 즉,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네덜란드의 사정상 식량안보차원에서 자국의 곡물 소비의 일정부분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농업 · 자연 · 식품 품질부 (LNV: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

☐ 기본 현황

- 네덜란드 농업 · 자연 · 식품 품질부는 농업, 환경, 식품 안전성 등의 문제를 관할하는 부서로 총 10개의 정책부서와 6개의 지휘부와 6개의 수출입 업무 부서를 갖추고 있음.
- 농식품 산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식품 안전성과 전반적인 산업 시스템의 감시와 같은 기본적인 감독만 하고, 대부분의 농정행정업무는 업체나 단체의 자율에 맡김. 특히, 품목별 단체(Product Board)의 활동이 활발해서 정부 개입이 적음.
- 식품 안전을 주로 관할하는 식품 · 상품 허가국(VWA)이 산하에 있는 데, 생산부터 소매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식품 안전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2>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 품질부(LNV)의 조직도



□ 주요 면담 내용

- 네덜란드는 생산농가들의 협동조합(Cooperative)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잘 조직되어 있음. 협동조합에서부터 수직결합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생산부터 소매까지의 전 단계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품목별 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
- 농업과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별다른 것이 없고, 연구 및 개발 지원이나 제도 개선 등의 사업이 진행 중임. 수출관련 지원정책은 정부차원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음.

- 식품산업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산업의 성장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산학협동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음. 특히, 신제품 개발의 경우 기존의 1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정책으로 중점 정책 중의 하나임. 교육정책의 실시는 농가들의 지식수준을 향상시켜 작목 전환이나 신품목 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얻고 있음. 또한 농가들의 자발적인 학습모임(Study Group)이 활성화 되어 교육 효과가 큼.
- 정책의 집행방식은 하향식 정책 대신 정책 대상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함. 즉 기본 아젠다를 정부가 제시하고 업체나 생산자 단체의 요구 사항을 받아서 지원하는 정책 방식임. 이러한 정책 집행을 위해 위원회를 3개월에 한 번씩 개최함.
- 네덜란드 농정에서의 최근 주요 이슈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과 바이오 매스 등임. 특히, 온실 사용이 많은 네덜란드는 온실의 난방 등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풍력발전 등의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있음.

3) 가축 및 축산물 위원회 (PVE: The Product Boards for Livestock, Meat and Eg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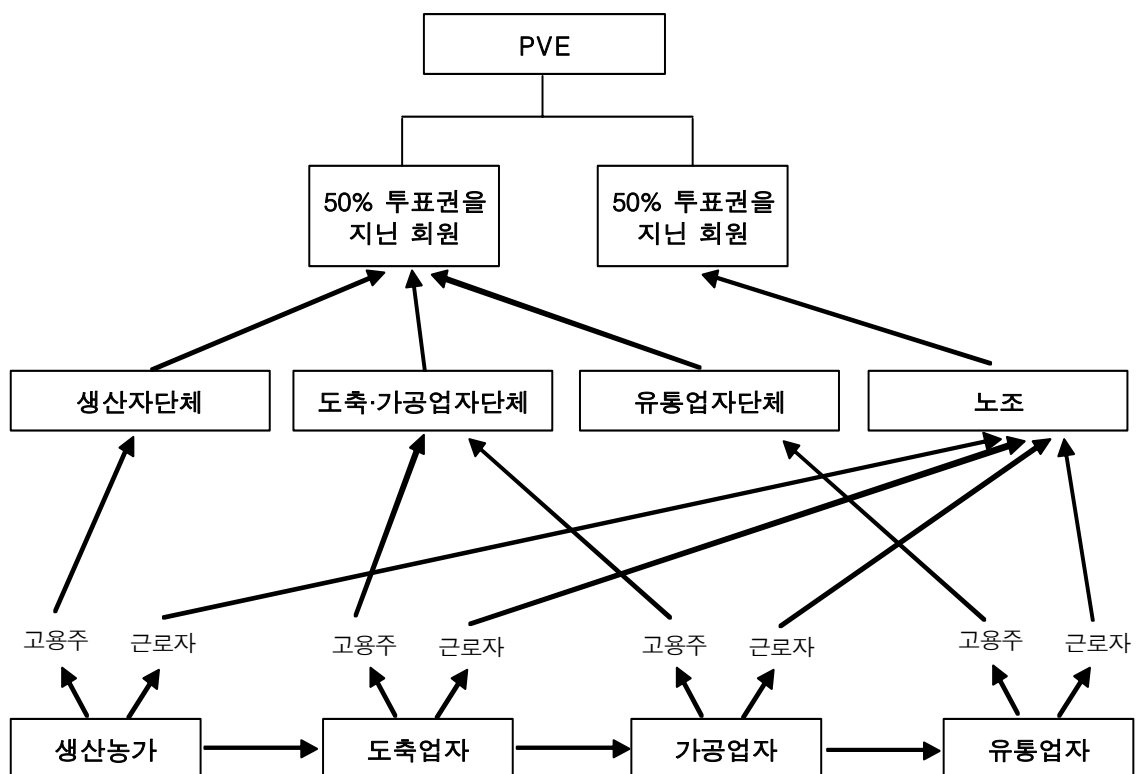
☐ 기본 현황

- 1954년 만들어진 관련 법(Statutory Trade Organisation Law)에 의거 설립된 가축 및 축산물 위원회는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의 중간적 기능을 하고 있음. 본 위원회는 품목별 위원회¹⁾로 해당 품목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의 행위 주체들을 아우르는 수직적 결합의 형태를 지님. 즉, 생산농가, 도축 및 가공업자, 유통업자들의 조직들이 각각의 회원으로 참여하는 상위 조직으로 구체적인 형태는 <그림 3>과 같음. 특이사항은 본 위원회 노동자 조합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50%의 투표권을 지니고 있는 사실임.

1) 네덜란드의 품목별 위원회는 가축 및 축산물(Livestock, Meat and Eggs) 위원회외에 어류(Fish), 경지 작물(Arable Crops), 가금류(Poultry), 원예작물(Horticulture), 곡물(Cereals/Grains) 낙농제품(Dairy), 음료제품(Drinks), 기름·유지(Fats/Oils), 동물사료(Animal Feeds), 포도주(Wine) 등에 구성되어 있음.

- 본 위원회 주요 기능은 정책 제안, 일부 정책의 집행(예: 수출보조금(Export Refunds), 고품질 인센티브(Slaughter Premiums)) 등의 공공 기능과 품질 보증과 가축 복지 향상 등의 자율 규제, 연구·개발, 홍보·광고 등의 민간 기능을 아우르고 있음. 특히, 정부 정책의 일부를 대행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
- 본 위원회 예산은 공공 기능에 대한 대가로 받는 정부 기금과 농가, 업체 등 민간 기단체로 부터 얻어지는 자조금으로 나누어짐. 자조금의 경우 생산농가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원으로 참여하는 도축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 모두가 납부하는데 징수의 근거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이렇게 모아진 예산은 2006년 3천3백만 유로이며, 이 중 36.5 %가 품질 향상에 사용되었으며, 가축 건강에 21.7%, 판매 촉진에 12.8%, 연구·개발에 1.4%, 기타에 27.6%에 투입되었음.

<그림 3> 네덜란드 가축 및 축산물 위원회(PVE) 구성



□ 주요 면담 내용

- 가축 및 축산물 위원회는 생산자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축산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의 전 부분의 행위 주체들을 위한 단체임.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식품안전성과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자율규제(Binding Rule)를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음. 이는 정부 기능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작은 정부의 실현이 가능하고, 협의회의 위상도 높아짐.
- 생산농가와 가공업자 혹은 유통업자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직접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함. 다만, 품질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PVE의 당면이슈는 가축 질병 방지를 위한 동물 백신 시스템 문제가 가장 크고, 가축 질병 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 활성화도 이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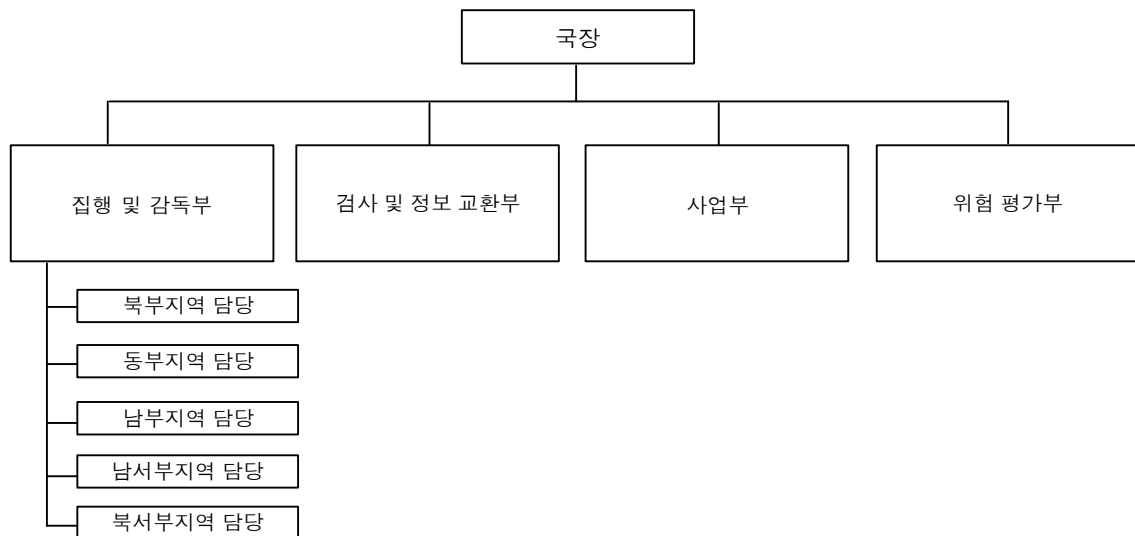
4) 식품 및 소비자 안전청(VWA: Food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Authority)

□ 기본 현황

- 2002년에 설립된 식품 및 소비자안전청은 과거 도매 이전단계까지의 식품 안전성을 관장하던 농업·자연·식품 품질부 산하 기관(RVV)과 도매부터의 식품 안전성을 관장하던 보건부 산하 기관(KVW)의 기능을 합친 기관임. 식품 및 소비자안전청의 관할 대상은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상품의 안전성인데, 그 범위가 원재료부터 소비재, 식품부터 비식품까지 매우 광범위함.
- 본청의 주요 업무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정보 교류(Risk Communication), 위험 관리(Risk Management)로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청은 농업·자연·식품 품질부의 하위기관으로 소속되어 있으나, 예산 지원 및 정책 과제 수탁은 농업·자연·식품 품질부와 보건부 양쪽에서

받고 있음. (2006년 기준으로, 농업·자연·식품 품질부에서 4천6백만 유로, 보건부에서 7천8백만 유로의 예산 지원) 이는 식품정책의 주무부서가 농업·자연·식품 품질부이지만, 건강 관련 문제는 보건부이기 때문이다. 또한, 육류 검사료로 민간부문 수입을 얻고 있는 데, 2006년 기준으로 4천5백만 유로임.

<그림 4> 식품 및 소비자청(VWA)의 조직도



□ 주요 면담 내용

- 식품 및 소비자청은 과거 농업·자연·식품 품질부와 보건부로 이원화되어있던 안전성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였고, 식품 외의 비식품과 원재료 및 부재료 등 인간과 동물의 건강과 관련되는 모든 대상을 다루고 있는 종합 기관임. 초기에 양 부서의 관련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청이 설립되었음.
- 위험 평가 업무는 본청에서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외부 대학이나 관련 연구소 등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함. 특히, 안전성 관리 업무를 위한 직원은 총 1,500여명으로 전체 인원의 89%에 달함. 이들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지역을 각각 담당하고 있음.

- VWA의 주요 당면이슈로는 본청의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 업무의 효율성 강화임. 즉, 본청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식품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감독 및 지원을 대폭 늘릴 예정임. 또한, HACCP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5) aT센타 로텔담 지사

□ 주요 면담 내용

- 네덜란드의 국토면적은 41,548km²로 한반도(99,900km²)의 절반 크기이나, 농업용지는 전체 국토의 절반을 넘음. 주요 농산물은 원예작물, 감자, 밀, 설탕수수, 옥수수(시료용) 등임. 특히, 남서부지역(Westland)은 과일·야채의 주요 온실지역인데 온실업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원예업계분야임. 개별 온실농가는 1~2개 원예농산물 재배를 전문으로 하고 있음.
- 농가 재배면적은 1~5ha이지만, 소규모 농가와 대규모 농가가 많고 중간 규모 농가가 적은 특성을 보임.
- 네덜란드 경제에서의 농업분야 비중은 관련기업 및 무역업체등을 총괄한 경우 국내경제의 약 10%(GDP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주요 농산물수출국으로 세계 제3위 농산물수출국가임(재수출포함).
- 네덜란드는 농산물과 식품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국가임. 주요 수입품은 커피, 카카오, 과일, 넛트류, 허브, 육류 및 유제품 등임. 주요 수출품은 원예작물인데, 특히 화훼와 구근수출은 세계 1위이며 그밖에 주요 원예생산물은 오이, 토마토, 샐러드, 양송이버섯, 과일, 파프리카 및 분화임.
- 네덜란드의 농업은 자연환경보호 농업을 중시하여 유기(biological)농법을 선택하고 있음. 또한 교토협약 준수를 위해 온실의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에너지 개발(예: 풍력 발전 시스템 도입 및 바이오 매스 개발)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2. 덴마크 출장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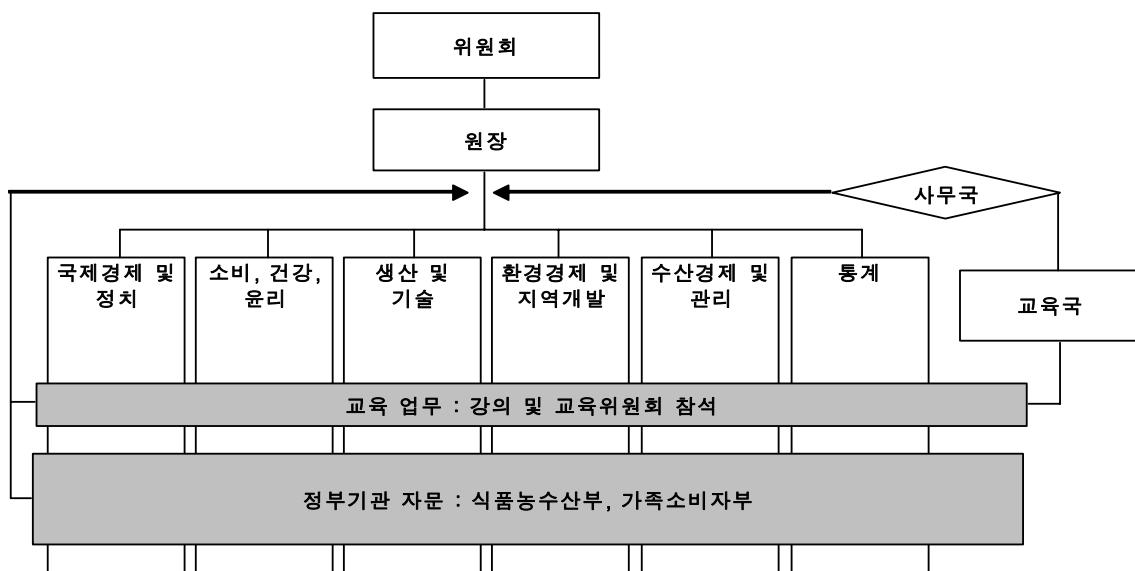
1) 식품·자원경제연구소 (FOI: Institute of Food & Resource Economics)

□ 기본 현황

○ 본 연구소는 코펜하겐 대학의 산하 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 교육, 대정부 자문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연구 분야에서는 국제경제 및 정치, 소비·건강·윤리, 생산 및 기술, 환경경제 및 지역 개발, 수산경제 및 관리, 통계 등의 전문 분야별 연구를 수행함. 교육 분야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코펜하겐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대정부 자문은 주로 식품·농수산부와 가족 소비자부의 정책 관련 자문을 하고 있으며, 동물복지(Animal Welfare) 관련 자문을 법무부에 하기도 함.

○ 연구소 예산 출처는 식품·농수산부와 가족 소비자부의 지원 예산과 교육 관련예산 및 EU로부터의 수입 등임.

<그림 5> 식품·자원경제연구소의 조직도



□ 주요 면담 내용

- 덴마크 농산업에서의 수직결합은 협동조합(Cooperative)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농가 조합이 도축·가공업체나 유통업체들을 설립하는 형태였음. 이러한 여건에 따라 농가와 가공 또는 유통업체와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음.
- 덴마크의 수직결합은 낙농과 돈육가공산업이 주를 이루는 데, 이들 산업이 대표적인 수출산업임. 특히, 돈육가공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85%정도가 수출되고 있음.
- 덴마크 돈육산업의 당면이슈로는 첫째, 값싼 폴란드 산 돈육가공품과의 경쟁 심화이고, 둘째, 식품안전성 문제임. 돈육가공품의 경쟁의 경우, 폴란드 산 햄이 덴마크산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나 가격이 약 10분의 1 수준이어서 수출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EU 국가를 포괄하는 수직결합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오히려 동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식품 안전성 문제의 경우, 살모넬라균에 대한 방역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나름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상태임.

2) 주 덴마크 대사관

□ 주요 면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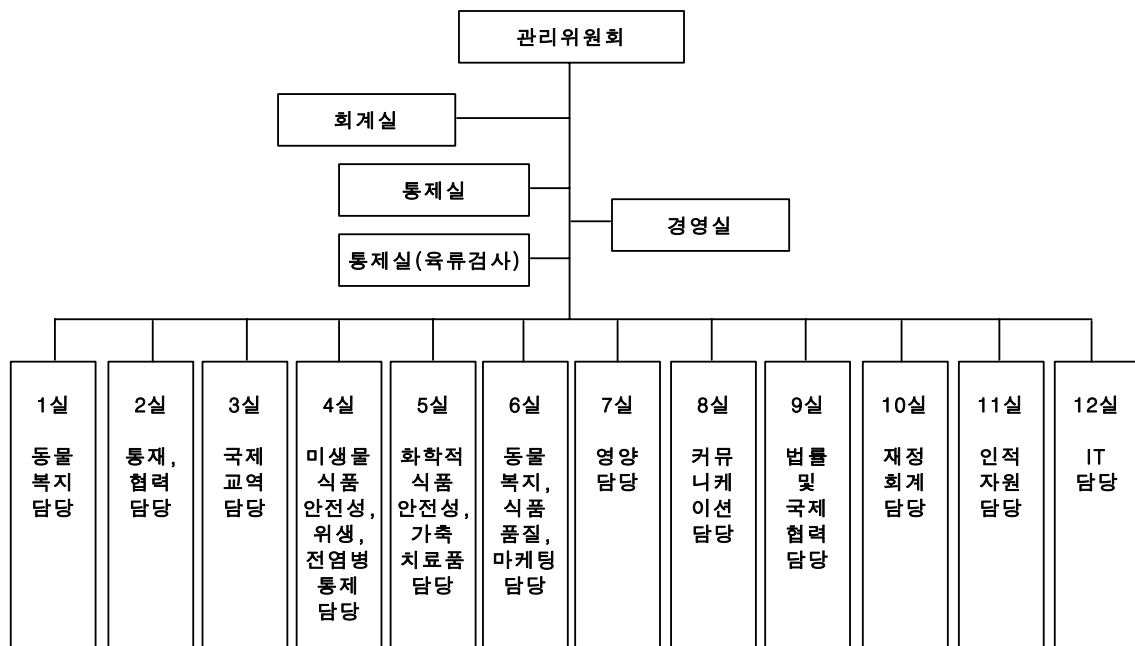
- 덴마크는 돈육가공품 등의 축산업이 발달한 나라이지만, 전체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음. 따라서 이웃한 네덜란드와는 달리 농업 정책이 우리나라처럼 지원정책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수산업의 경우 한계어가의 퇴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 덴마크 거주 한인수는 약 40여명으로 덴마크 경제에 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음. 입양된 한인들이 많은데, 이들의 경우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이 낮고, 한국 식품에 대한 이해나 호응도 떨어짐. 따라서, 대사관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한국과 한국 문화 알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3) 수의식품청(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

□ 기본 현황

- 2004년 8월 식품농수산부의 식품안전부분이 독립하여 식품농수산부와는 별도로 가정소비자자부가 신설됨. 가족소비자부(Ministry of Family and Consumer Affairs)는 소비자보호 증대, 식품안전과 영양에 대한 식품업체와 소비자들간의 의사소통 향상,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일관 검사제도 제정 및 수출생산품의 신뢰 보장을 주요한 임무로 수행함.
- 이에 따라 수의식품청(DVFA)은 식품농수산부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가족소비자부로 편입되어 식품안전관리의 주무부처가 변경되었음. DVFA는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식품 안전성과 가축 건강을 관리하고 있음.
- DVFA는 식품안전성 및 위생실, 식품영양실 등의 12개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본부에 330명, 지역본부에 1,525명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음. 이들의 주요업무중의 하나인 식품 안전성 검사는 5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소매업체의 식품 안전관리 상태를 스마일 표시로 제시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함.

<그림 6> 덴마크 식품수의청(DVFA)의 조직도



□ 주요 면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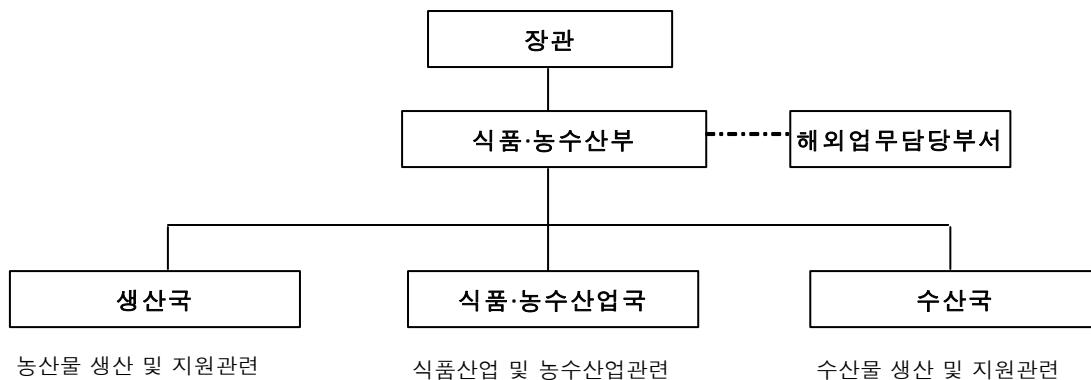
- DVFA의 당면 이슈로는 발생 가능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 작업임. 특히, 수년간 심각한 문제가 되어온 광우병(BSE), 조류독감, 살모넬라 등의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한편 업체의 식품 안전 관리 점검 후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 특히, 식품 안전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중소 업체의 경우 식품 안전 관리 점검 이외에도 향후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의 노력도 함.

4) 식품·농수산부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 기본 현황

- 덴마크 식품·농수산부는 크게 생산국, 식품·농수산업국, 수산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인원은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약 1,500여명에 이름. 특히 식품·농수산업국을 하나의 국으로 운영하여 식품산업을 중시하고 있음.
- 덴마크 식품·농수산부는 생산과 식품산업 외의 산지단계에서의 식품 안전성 검사도 시행하고 있음. 이후 단계의 안전성 검사는 가족·소비자의 산하기관인 가족 및 식품 관리국 등에서 실시함.

<그림 7> 식품·농수산부의 조직도



□ 주요 면담 내용

- 덴마크 농수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GDP 기준)정도로 낮으며, EU정책 틀내에서 농업과 수산업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 농업부문 지원책으로는 EU 수출 보조금(Export Refund)) 등을 들 수 있으며, 수산업의 경우 한계 어가의 퇴출지원 등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이 WTO 등으로 인한 시장 개방에 따라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농업 당면 이슈로는 유기농 식품산업의 관리 및 지원임. 덴마크의 경우, 1980년 중반부터 유기농 식품의 수요가 발생하여, 신선유부터 유기농 식품 시장이 형성되어 육류 등으로 확산되었음. 이러한 유기농 시장은 1990년 후반에 정점을 이루다가 2000년대부터 성숙기로 접어들었으나 최근 쇠퇴하는 모습을 보임. 따라서, 이에 대한 진흥정책(예: 직접지불제)을 마련하고 있음.
- 수직결합의 경우,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Cooperative)에서부터 결합이 180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정부의 별다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음. 대표적인 사례가 식품 회사인 ARLA Foods임. 본 회사는 우유 농가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현재 유럽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
- 덴마크 농정의 주요 이슈로는 소농에의 직접지불제 등의 지원책과 환경 문제임. 환경 문제로는 비정부기구의 환경운동에의 대응과 바이오 매스 개발 등임.

3. 주요 시사점

-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는 협동조합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연계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품목별 위원회가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관련이해단체를 통합하여 각구성원의 자발적인 협력 및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품목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자조금위원회 등이 존재하나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시키는 효과가 미약해 한계가 있음. 따라서 생산에서부터 소매유통까지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품목별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들 두 국가에서 식품이 농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는 1차 생산물인 농축산물의 가공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고, 생산농가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기 때문임. 이러한 사실은 관계기관의 명칭만 봐도 알 수 있는 데, 네덜란드의 “농업·자연·식품 품질부”와 덴마크의 “식품·농수산부”가 대표적임.
- 우리나라도 최근 농림부의 기관 명칭에 “식품”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식품산업 관련 부서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선진국의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로 보여짐.
- 네덜란드와 덴마크 사례에서 보듯이 식품의 안전성 관리는 특정기관에서 총괄하는 것이 더 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네덜란드 VWA는 우리처럼 이원화되었던 관리 부서들을 하나로 통합한 후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어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음. 다만 조직의 슬림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위험평가 등의 업무를 아웃 소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식품 안전성 관리의 효율성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서 식품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은 거의 없을 정도로 식품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수단은 강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경

우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관련 담당자들은 식품산업 시스템 운영에 있어 정부 개입이 적을수록 좋다는 의견을 보였음.

- 정부는 식품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발전 전략 내지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것의 달성을 위한 생산자나 업체의 구체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사실에 상당한 공감을 얻었음. 우리나라처럼 규제 중심의 하향식 정책 집행으로는 식품산업 주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나쁜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임.